끼익! 급정거…운전자들 "아직은 적응 안되네"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교통 정체 우려 vs 보행자 보호 도움
광주북부경찰, 하루 70대 적발 과태료
패밀리랜드 부근 등 120대 적발도
제도 변경 몰라 적극 홍보 필요

'끼익, 끼익.'

18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 주행하던 차량들이 부랴부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진 도로에서 이뤄지고 있던 경찰의 과속 단속을 발견한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면서다.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고정식 카메라가 없으면 단속이 안되는 줄 알았다"며 머쓱해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시속 50㎞를 초과한 차량 70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 17일에는 패밀리랜드 부근 등 에서 무려 120대의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

광주·전남에서도 '안전속도 5030'정책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제한속도 하향 조치를 준비해온데다,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도 마무리되면서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바뀌는 안전속도 제한으로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지 모르는 만큼 운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의 경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이 이번 정책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된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도 30㎞/h로 낮춰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정인철(39)씨는 "얼마 전부터 도심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숫자가 50㎞로 바뀐 것을 보고 제한 속도가 낮춰진 것은 알고 있었다"며 "가뜩이나 공사 구간이 많은데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정체가 심해질 까 걱정도 되지만 보행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제도 변경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차량의 도심 제한속도를 50㎞로 제한한 것을 두고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도심 도로 체증이 심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도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 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한속도를 내려도 실제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 중에 있다"며 "운전자들께서는 도로 제한속도에 맞는 주행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미쇼핑 사거리, 제한속도가 50km임을 안내하는 표지판 아래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장애인 학생 통학차량에서 사망 관리 담당자 무죄 선고

장애인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사가 통학차량을 타고 가다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광주시 한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서 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은 뇌 병변 장애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버스 운행 중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혼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B군은 학교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68일 만인 2016년 6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B군이 버스에서 25분여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B군을 주시하지 않았고 B군이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고개를 바로 세워주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B군의 머리 자세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B군의 머리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숙여진 것인지 좌석에 비스듬하게 기댄 상태였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 간 지속했을 경우 고개 기울임 자체가 기도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대한 법의학회 감정결과 등을 들어 자세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 것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다음달 11일부터 12만~13만원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12만원과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남구 등 각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감이 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9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9~30일 '장애 인권 주간'

광주시교육청 '장애인의 날'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전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인권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장애 인권 주간 운영은 장애 이해와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전체 기관과 학교에서 장애 이해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서한문 게시와 배포 ▲현수막 게시 ▲계기수업 자료 제공 ▲신문 제작과 보급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의 날 당일인 20일에는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교원 3명·교육행정직원 1명)과 교육감 표창(장애학생 5명·통합학급 담임교사 4명·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3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업주 예상대로?…산재 사망 책임 사업주 집유 선고

노동계 '국민 법감정 고려 안해' 지적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사업주 〈광주일보 3월 10·15일 6면〉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지난달 재판장을 향해 "사업주는 합의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던 말대로였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당 사업주와 법인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하긴 했지만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해당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통상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엄중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처벌과 벌금액으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은 지난달 검찰 구형 과정에서 "한 개의 안전 장비도 없이 7m 높이에서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했었다. 재판부도 "사회적 분위기도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처음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피해자 과실도 존재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형집행이 미뤄지기만 할 뿐 실형을 받지 않는다면 산재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예정된 폐목재 가공업체 산재 사고 판결도 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5731	1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55, 102동 9층 903호 [대선해시앙아파트] 63.1089㎡	아파트	176,000,000 176,000,000	2020타경54603[중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5397	1	목포시 항동 2-8 62.8㎡	대	71,788,600 71,788,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소로1류[폭10m~12m]저촉
		목포시 만호로 34-1 1층60.17㎡ 2층주택36.36㎡ 제시외 주택 등 77.3㎡[건물일부인접도로[항동7]지상소재.제시외건물은목록1토지및인접대지[항동2-9,2-13]지상소재]	주택및점포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3407	1	신안군 신의면 고평사도리 1 383㎡	전	27,485,600 27,485,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 3081㎡[물건번호1:현황휴경지및일부도로]	전		
2020타경 5496	1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440-2 2509㎡	답	47,671,000 47,67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564	1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576 631.0㎡[비닐하우스2동매각제외.단독주택부지로이용중]	대	30,919,000 30,919,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745-6 1382.0㎡[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자미상분묘2기소재]	전	31,786,000 31,786,000	말소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되는가등기있음
2020타경 5687	1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016-5 826㎡[현황상업나지임]	답	336,182,000 336,1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830	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00 43651㎡[공유자이현식지분1448370/7505190전부.연고자미상분묘수기소재.일부소하천구역저촉]	임야	32,853,600 32,853,6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0타경 6079	1	신안군 흑산면 예리 167-3 150㎡[공유자황복단지분18/90전부,공유자정평균,정정호,정대형,정춘희,정명희,정성희지분각2/90전부.수목포함감정가]	대	5,500,000 5,5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일부인접지의부속토지로이용중,일부는수목식생하는임야상태
	2	동소 167-6 143㎡[목록1과지분동일.주택및창고부지로이용중,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6,725,700 6,725,7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20타경 54382	1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5-28 165㎡	잡종지	24,915,000 24,915,000	
2020타경 54719	1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953-1 1859㎡[지상소재FRP물통및묘판은평가및매각제외.현황"잡종지[일부콘크리트포장]"임]	답	54,160,700 54,160,7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동소 953-2 3345㎡	답		
2020타경 54832	1	영암군 영암읍 역리 429-2 927㎡	답	176,130,000 176,130,000	현황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54641	1	목포시 양을로248, 3층 205호 [용해동,법조빌딩] 59.28㎡	근린시설	54,000,000 54,000,000	
	2	목포시 양을로248, 3층 203호 [용해동,법조빌딩] 74.88㎡	근린시설	68,000,000 68,000,000	
[자동차,중기]					
2021타경 50325	1	사용본거지:완도군 군외면 동화도길 3-3 등록번호:05주0850 차명:제네시스 연식:2016	자동차	23,000,000 23,000,000	보관: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제3자보관중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5. 3.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5. 10.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